

무능과 혐오의 정치 1년, 그래도 역사는 진보한다

이주희

이화여대 사회학과
교수

역사학자 네틀 J. P. Nettl은 “개념적 변수로서의 국가”라는 에세이에서 미국, 영국, 유럽내륙 국가의 ‘국가성 stateness’에 내재한 제도적, 문화적 차이를 밝힌 바 있다. 역사적 발전 경로의 차이로 국민 주권이 주로 발현되는 곳이, 유럽은 중앙행정기구, 영국은 정당과 의회, 그리고 삼권분립을 주장하는 미국의 경우는 특정 기구보다는 법과 헌법으로, 서로 다르다는 것이다. 우리는 삼권분립 하의 대통령제이지만, 권위주의 정권의 영향으로 대통령실과 행정부에 항상 과도한 힘이 실려 왔다. 훌륭한 대통령일 경우 권력을 독점하지 않겠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던 만큼, 정치가 퇴행하며 경제와 민생이 극도로 불안해지는 경우를 우리는 종종 목격했다. 윤석열 행정부의 일 년보다 이를 더 잘 보여주는 사례는 드물다. 어떤 정권이라도 일 년 차에는 보기 힘든 엄청난 사건 사고와 함께 도대체 무엇을 하고자 하는지 알 수 없는, 혼돈의 한 해가 저물 무렵, 갑자기 세 가지 ‘개혁’이 등장했다. 이미 우리 교육은 신자유주의적으로 서열화된 체제가 고착된 상태이다. 이런 현실을 그대로 유지, 강화하겠다는 것이 어떻게 교육개혁일 수 있는가? 또, 국민연금의 엄청난 손실을 국민에게 단순히 떠넘기겠다는 것이 어떻게 연금개혁일 수 있는가? 따라서, 윤 정부가 하고자 하는 일은 개혁이라는 명칭이 가장 잘못 사용되고 있는 ‘노동’ 하나로 축소된다.

노동 ‘개악’과 지키지 않는 공약들

초장시간 노동을 ‘유연화’로 포장해 추진하려는 윤 정부의 노동정책은 행정 권력의 대표적인 남용 사례이다. 경영계 의견을 여과 없이 받아 지금도 세계 기준에서 매우 후진적인 장시간 노동 관행을 완화하는 대신 주당 70시간 안팎으로 늘리겠다는 것이다. 특히 정부가 공을 들이는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정산 기간 확대는 여소야대 국회의 승인을 받아야 법이 개정될 수 있는데, 국회나 노동계와의 논의 없이 이처럼 밀어붙이는 것은 행정 권력의 범위를 지나치게 확대 해석하는 것이다. 이미 IT업계 등의 요구로 특정 업무에 한해 1개월에서 3개월로 연장된 지 얼마 되지 않은 만큼 노동계의 반발로 개정도 쉽지 않을 것이다. 문제는 특별연장근로 제도이다. 특별연장근로 대상 선정이나 근로시간면제 업종은 법의 개정 없이 행정부의 의지로 가능하므로 사회적 합의 없이도 초장시간 노동이 확대될 수 있다. 이미 문재인 정부가 주 52시간 보완 대책으로 인가 사유를 대폭 확대한 탓에 2019년 9백여 건에 불과했던 승인 건수가 2021년 6천 건이 넘게 폭증한 바 있다. 윤 정부는 이런 문 정부보다 더 나아가, 신청되는 특별연장근로를 거의 다 승인해 주고 있다. 그 결과 2022년 초부터 9월까지 약 반년을 조금 넘긴 시기에 이미 7천 건이 넘는 연장근로가 승인되었다. 장시간 노동은 영세한 무노조 기업에서 더 제약 없이 행해지는 만큼, 산재와 질병의 주요 원인이 된다. 노동조합에 대한 무차별적인 공격은 행정 권력의 남용을 넘어 오용에 해당한다. 지난 5년간 노조에 엄청난 액수의 혈세가 투입되었다는 말에 대한 구체적인 반박 기사들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국고보조금을 받은 노조에게 그 보조금에 대한 회계자료 외에 노조 자체의 조합비 회계자료까지 요구하는 것은 노동운동이라는 사적 자치의 영역에 대한 월권이며, 경영자 단체 등 다른 시민사회 결사체와의 형평성 차원에서조차 잘못된 일이다.

노조에 대한 공격이 이런 이슈에 반응하는 특정 집단을 자극해 지지율을 일시적으로 올릴 수 있을지는 몰라도, 장기적으로는 정권에 대한 지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리라 판단된다. 20대 대선 결과는 0.73% 차이라는 박빙이었다. 이는 우리 사회에 두 가지 신념체계가 충돌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한다. 시장 정의에 기반한 공정한 경쟁과 성과주의 원칙의 뒤늦은 확산이 강렬하지만, 바로 그런 경쟁의 기회조차 박탈당한 좌절과 일자리 위기에 따른 복지 수요도 강력하게 존재하는 것이다. 또한 코로나 19로 재난지원금을 받은 경험을 통해 복지의 ‘보편성’에 대한 관심도 증가하고 있다. 현재와 같이 친재벌과 친기업에 지나치게 경도된 정책은 중산층화된 노조원과 그 가족 구성원의 정권에 대한 지지를 거두게 만드는, 그래서 중도층의 지지를 받기 어렵게 만들 수 있다. 만일 윤 정부가 진정으로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개선하길 원한다면 산별 노조의 핵심적 교섭내용에 대한 효력 확장을 포함, 단체교섭을 집중화할 수 있는 구조의 개선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또한, 노동시장 이중구조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거래의 공정성을 제고해야만 해결의 단초를 찾을 수 있다. 문제제기를 한 중소기업의 대기업의 보복 조치에 대한 법적 조치 및 실효성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 없이는 대 중소기업 간 공정한 거래는 실행되기 어렵다.

노동과 관련된 윤 행정부의 더 큰 문제는 행정 권력의 오남용을 통해 현재 하고 있는 일보다, 대선

기간 공약으로 약속하고도 전혀 하고 있지 않은 일들이다. 윤석열 당시 후보는 대선 기간 출간된 국민의 힘 공약집에서 “플랫폼종사자 등 다양한 고용형태를 포괄한 모든 노동자의 기본적 권리 보장을 법 제화”하겠다고 했을 뿐 아니라, 당시 한국노총에서 요구한 질문에 대한 답변에서는 그동안 축적된 논의 내용을 바탕으로 임기 초반에 법 제정을 추진하겠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 이미 임기 2년 차를 앞두고 있으나 이에 대한 논의는 흔적조차 찾을 수 없다. 한국노총이 대선주자에 요청한 답변서에는 이 외에도 “비정규직 사용을 총량규제 방식으로 전환하여 이를 초과하는 기업에 대하여 고율의 고용 보험료를 부과”하고, “매달 통상임금의 10%를 적립하여 비정규직 고용 종료 시 고용안정 지원수당으로 지급”하겠다는 내용도 있다. 공약을 통해 표를 받고 승리한 대통령이라면 이와 같은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는 것이 올바른 태도일 것이다.

대통령의 에토스, '혐오'정치

지금으로부터 십여 년 전, 나는 미국에서 연구년을 보내며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탄생을 지켜보았다. 공화당 메케인 후보에 크게 뒤쳐지던 오바마 후보는 2008년 부동산 대출 업체의 파산으로 시작된 심각한 금융위기를 계기로 역전승을 거두었다. 그래, 미국 같은 나라에서 흑인이 대통령이 되려면 이 정도 경제 위기는 발생해야 했겠지. 믿기지 않는 극적인 역전승을 눈앞에서 목격한 나는 그해 12월, 예정되었던 학회에 참석하기 위해 그리스로 떠났다. 하지만 2008년 겨울, 그리스는 폭동 중이었다. 15세 어린 소년이 아테네 시내 중심부에서 경찰이 쏜 총에 숨졌다. 그 죽음은 30%에 이르는 최악의 청년 실업률을 배경으로 진행된 대학 민영화와 복지예산삭감, 그리고 부패 스캔들이 대규모 반정부 시위로 촉발되는 데 결정적인 기여를 하게 된다. 악화되는 소득불평등과 더불어, 특수 사립학교나 해외대학에 자신의 자녀를 보내는 그리스 엘리트집단이 청년실업과 저임금을 방치하는 동안, 형편없는 일자리에 좌절한 젊은이들의 분노가 폭발했기 때문이다.

아테네 공항 폐쇄로 학회 당일 출국하려던 유럽 참가자들이 전원 불참하게 된 탓에, 학회를 주최한 아테네대학 아니스 바루파키스 경제학과 교수와 나를 포함, 하루 먼저 대륙을 건너온 소수의 참가자들은 고대의 부서진 유물과 현재의 폭력의 잔해가 묘하게 조화를 이룬 아테네의 한 야외 식당에서 당시 화제였던 미국 대통령 선거에 대해 이야기를 나눌 기회를 얻었다. 바루파키스 교수는 단호했다. “아무 것도 달라질 것이 없고, 오바마는 제대로 일도 하지 못할 것이며, 그 역시 미국 패권주의를 위해 덜 힘센 나라들을 괴롭힐 것이다”가 그의 주장이었다. 바루파키스 교수는 그 이후 그리스 시리자(급진좌파 연합) 내각의 재무장관으로 특히 독일 메르켈 총리와 그리스 채무를 둘러싸고 짧지만 힘든 싸움을 벌인 바 있다. 자본주의 하 민주주의의 한계를 끊임없이 지적했던 그는 기본소득의 지지자이기도 하다. 그는 기본소득을 자본소득과 노동소득의 불균형으로 인한 총수요감소에 대응하는 반 디플레이션 정책으로서, 사회적 구매력을 확장하는 가장 단순하고도 효과적인 정책으로 인정했다. 역사적인 그리스

폭동의 현장에서, 전쟁터 같은 아테네 시내에서 들었던 바루파키스 당시 교수의 말은 묘하게 설득력이 있었고, 나 역시 큰 맥락에서 그에 동의한다. 오바마 케어의 굴곡진 역사와 한계를 고려한다면, 미국의 대통령이 누가 되든 미국민, 특히 어렵고 힘든 사람들의 삶이 크게 바뀔 수 있을까, 매우 회의적이다. 우리도 마찬가지였다.

그러나 윤석열 행정부를 일 년 가까이 겪으며, 나는 대통령의 에토스(Ethos)가 얼마나 사회에 깊은 울림을 주는지 깨달았다. 그는 특수부 검사 출신이고, 수많은 유사 검사들이 행정부의 요직에 진입했다. 법조인, 특히 검사는 이미 발생한 사건과 상황의 위법성을 법에 근거해 사후적으로 파헤치는 일에 종사하는 만큼, 다가올 미래를 먼저 주시하며 국민에게 끊임없이 영감을 불러일으켜야 하는, 기존의 부족한 법을 바꾸어 낼 동력을 만들어내야 하는 정치와는 완전히 상극인 직종이다. 우리 국민에게는 매우 불행하게도, 이 치명적인 자질 부족을 극복하려는 방편으로 윤 대통령은 내 편을 넓혀 통합하는 것이 아닌, 상대편을 분열시켜 서로 싸우게 함으로써 국정의 동력을 얻는 혐오의 정치를 선택했다. 혐오를 원초적인 본능으로 보는 경우, 이는 생존에 위협이 되는 물질과 대상을 만났을 때 느끼게 되는 적대적 감정으로 정의된다. 오염원이 될 수 있는 물질은 인간에게 자신의 동물성과 죽음을 상기시키는 존재로, 설사 무해하다 해도 그걸 만지게 되면 자신까지 오염될 것이란 비합리적인 생각을 유발하기도 한다. 마사 누스바움(Martha C. Nussbaum)은 혐오라는 감정의 비합리성이 이런 원초적인 혐오에서 투사적 혐오로 넘어갈 때 더욱 극대화된다고 주장한다. 혐오를 유발하는 대상의 특성을 종속적인 지위에 있는 다른 인간에게 투사시킴으로써 지배적 집단이 좀 더 안전하게 자신을 유한성으로부터 보호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런 투사적 혐오는 차별과 배제의 원천이며 특정 소수자 집단에 대한 언어적, 물리적 폭력으로 이어질 수 있다.

우리 사회에서도 이민자나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혐오가 점차 확산되고 있지만, 서구와 차이점은 극단적인 능력주의 담론의 확대와 함께 상대적으로 열등한 생산성을 지녔다고 여겨지는 집단에 대한 혐오가 만연하고 있다는 점이다. 즉, 낯선 것에 대한 두려움이라는 본능적인 감정인 혐오가 우리의 사회구조적 맥락에서는 좀 더 광범위한 대상에게 투사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마치 백인 중심 사회에서는 이질적인 유색인종이거나 이민자가 주된 혐오의 대상이듯이, 남성 중심적 조직이나 사회에서는 여성이, 젊음이 바람직한 기준인 사회에서는 노인이, 비장애인 위주의 사회에서는 장애인이, 자본(기업, 특히 재벌) 중심의 사회에서는 노동이 그런 혐오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지난 일 년 간, 우리 사회는 약자가 강자에게 무릎 꿇는 것이 당연시되는, 그런 지독한 혐오 사회로 몇 발자국 더 다가갔다. 모두가 존중받으며 적극적인 자유를 향유하는 대신, 가장 힘센 기구인 국가가 과연 누구에게 도움이 되는 것인지도 모호한 ‘국익’을 위해서 개인이 건강하게 차별받지 않고 노동하고 쉴 자유가 제한되는 것이 당연한 사회로 변질되었다. 국가가 항상 이렇게 고자세로 나오는 것은 아니다. 일본 강제징용 배상안에서 볼 수 있다시피, 우리보다 강하다고 여겨지는 다른 국가에 대해서는 지나치게 저자세로 일관해서 국민에게 수치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약자에게 강하고 강자에게 약하다는 면에서는 참으로 일관적이다.

그래도 시간은 흐르고, 역사는 진보한다

일반적으로, 앞에서 언급한 바루파키스 전 장관의 통찰은 맞다. 신자유주의라는 특수한 역사적 국면에서 대통령 한 명이 바꿀 수 있는 것은 많지 않다. 세계화된 경제체제에서 개방형 경제를 운영하는 우리의 경우, 비록 보수 정권과는 수준과 강도의 차이는 있을지라도, 진보진영의 어떤 대통령도 신자유주의의 거센 물결을 이겨내지 못했다. 그런데, 유능한 대통령만 역사를 진전시키는 것은 아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무능과 혐오의 정치는 그동안 신자유주의에 덧씌워져 있던 번쩍이는 포장지를 걷어내 그것의 거친 민낯을 보도록 만들었다. 그의 정치는 지난 수십 년간 우리를 괴롭혀 온 신자유주의 정책의 배설물을 보다 명징하게 드러냄으로써 변화에 대한 열망과 추동력을 제공하는 유용한 도구가 될 수도 있다. 현란한 포장에 속아 신자유주의가 결국은 더 많은 빈곤을, 더 심한 적극적 자유의 제약을 가져오는 기제(mechanisms)를 파악하지 못했다고 해도, 모든 사람이 영원히 그런 상태에 있을 수는 없기 때문이다.

경제 자본이 아무리 불평등하게 분포된 자본주의라고 해도, 선거에서 누구나 한 표를 갖는 민주주의제도 하의 대통령은 국민이 선택해서 그 자리에 오른 것이다. 대통령이 평등과 통합의 에토스를 만들어낼 가능성이 전무하다면, 대신 국민이 더 노력하면 된다. 국가와 시민사회는 변증법적인 관계에 있다. 모든 작용에는 반작용이 따른다. 능력주의를 신봉하는 청년들이 장시간 노동에 찬성하리라 여기는 것은 착각이다. 우리 사회도 전 세계적 추세를 따라 여가와 삶의 질을 소중히 여기며, 이런 성향은 젊은 층에 훨씬 더 광범위하게 퍼져 있다. 혐오 정치는 구체적인 실체가 없는 담론의 영역에 더 가깝다. 실제 삶에서 그런 담론이 유의미한 이득을 창출하지 못한다면 그런 담론은 재생산되지 못한다. 특히 경제적 어려움과 위기의 징후가 이처럼 분명할 때에는. 진보는 비록 일시적인 후퇴와 지루한 기다림으로 발목 잡힌다 해도 과거의 경험에서 배워 조금씩이라도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 곁의 어려운 동료 시민이 결국 나의 미래가 될 수도 있음을 인지하고 협력해 앞으로 나아갈 힘을 얻을 수 있다면, 앞으로 남은 몇 년의 시간은 생각보다 빨리 흐를 수도 있을 것 같다.